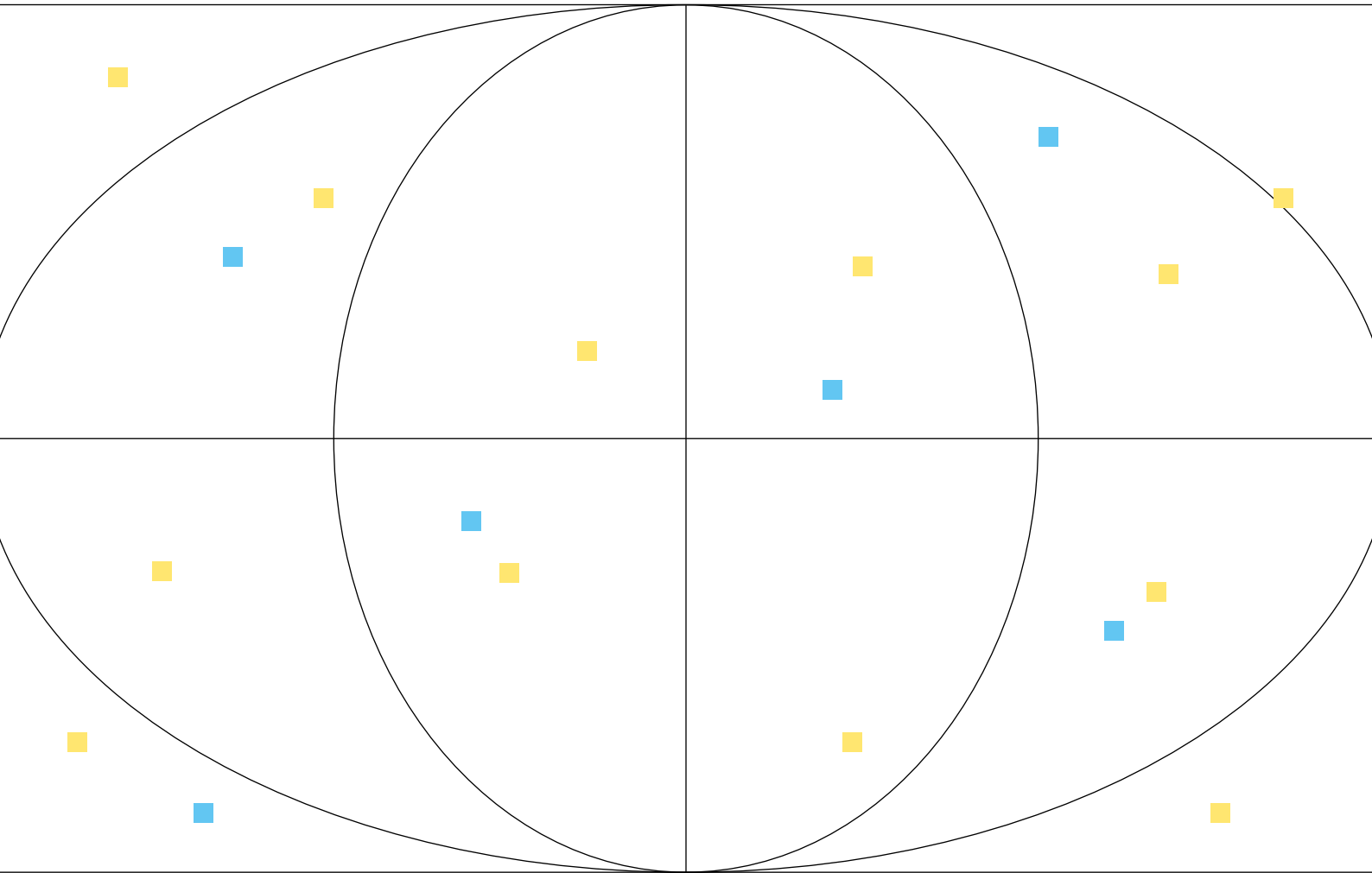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목차

발간사 04

저자 소개 06

신정부 외교안보 전략 제언 요약

한미동맹과 대북 전략 12

대일 전략 14

대중 전략 15

경제안보 전략 16

1 한미동맹과 대북전략: 구조적 변화 속 주도적 전략 기획의 필요성

‘삼중 도전’과 능동적 동맹 변환론 21

대북 전략의 재설계와 국제 구조 속 조건 변화 22

실용 외교의 재정립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남북관계 인식 23

2 대일·대중 전략: 불확실성 속 협력과 균형의 줄타기

한일관계의 향방: 전략적 변동과 협력의 가능성	25
미·중 전략경쟁 속 대중 전략	26
실용 외교와 전략적 대응: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 방향	27

3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경제안보 대응 전략: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의 경제안보와 반도체 전략	30
한국 AI 생태계 육성 전략과 기술외교	31
기관 소개	33

발간사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최종현학술원은 2025년 7월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성과를 전략 제언집으로 발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술 패권 갈등, 국제통상질서 재편과 동맹의 역할 변화 등 복합적인 외교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단순한 국제질서의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 형성자로서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세 기관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둔 균형 잡힌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정부와 민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책 대화를 함께 조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 재구성, 대중국 전략, 반도체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경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전략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제언집은 이러한 논의의 결정체로, 학술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기여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인 만큼, 세 기관의 협력 모델이 우리나라가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넘어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최종현학술원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8월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손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강원택

최종현학술원 대표 · 김유석

저자 소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및 언더우드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국제학대학원 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외교와 정치경제, 미일관계, 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 공공외교 등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겸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정치, 정당 및 선거정치, 정치제도 등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 석사학위 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

현재 최종현학술원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를 겸하고 있다. SK 주식회사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SK 온 경영전략본부장,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마케팅 본부장, SK 에너지 전략본부장, SK China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BP LNG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 이사, 맥킨지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외교부 외교정책실, 대통령 비서실 의전 행정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의 부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관, 국제정책과장, 재정계획과장, 전력정책과장, 조직과장, 미주정책과 대미정책 담당을 역임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정치학회 및 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북한, 평화 및 안보연구, 한국외교 등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 국제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손인주

서울대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겸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소장, 홍콩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부교수,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미·중관계, 국제정치경제 등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핵물질관리학회 이사,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 위원, 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 네트워크 한국 멤버, 미국 스티븐슨센터 방문연구원을 겸직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기획관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섐페인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재료연구부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 화학 공정 및 소재 설계 관련 멀티스케일/멀티피직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 정보 및 신호 이론/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생물공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 국제정치 데이터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정치학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공로로 미국정치학회로부터 해롤드 가즈넬상(2010년)과 통계 소프트웨어상(2013년)을 수상하였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

현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자문위원, 국회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 동아시아경제론, 국제금융론이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자문위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자문위원장,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자문위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자문위원, 산업통상부 통상안보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대만 펠로우십 대만국립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과학기술과 세계정치,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외교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채플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기획 및 편집

최종현학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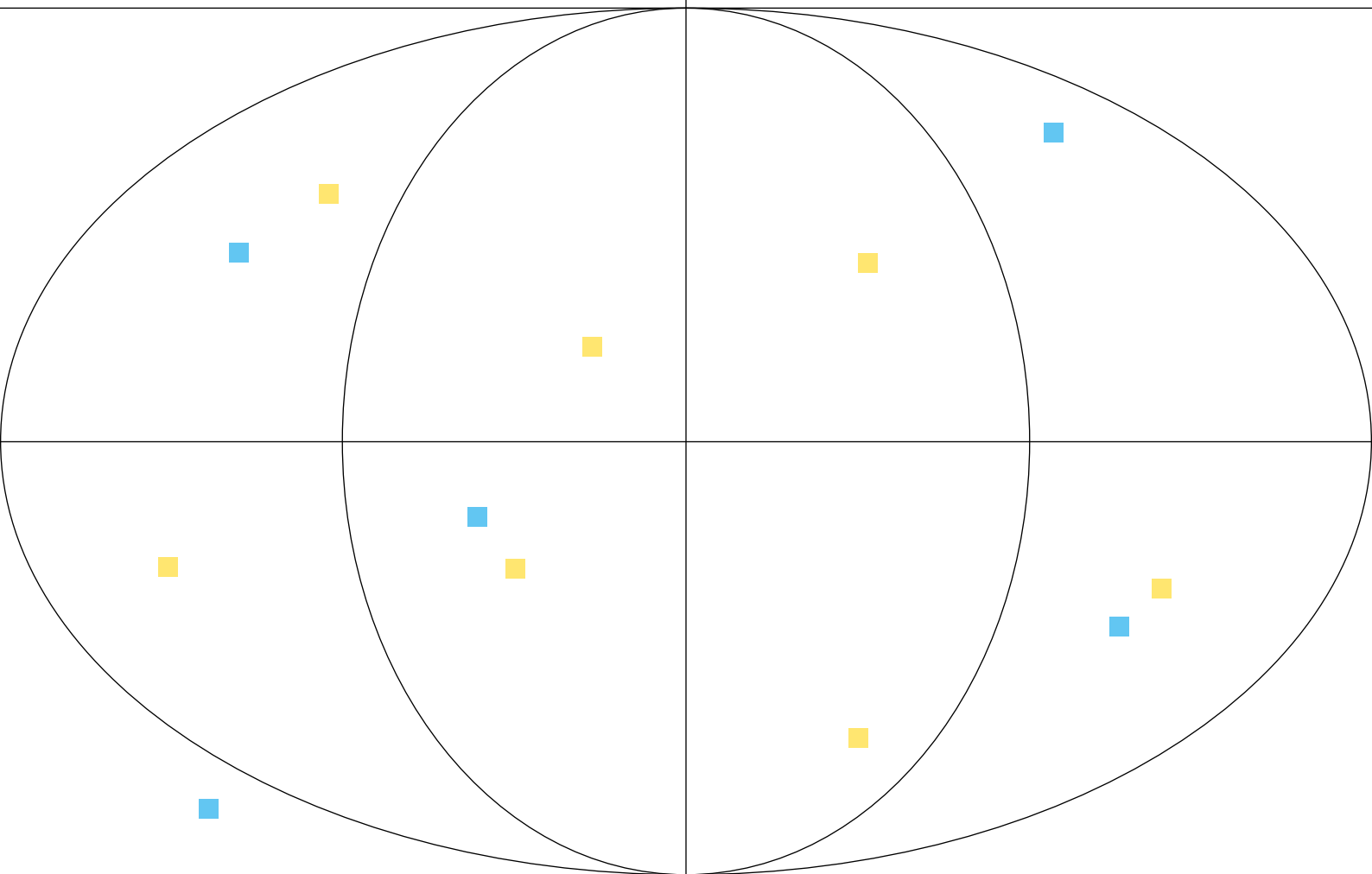
서희정 국제학술1팀 팀장
김민승 국제학술1팀 매니저
정동호 국제학술1팀 매니저
박혜연 국제학술1팀 매니저
강준호 국제학술1팀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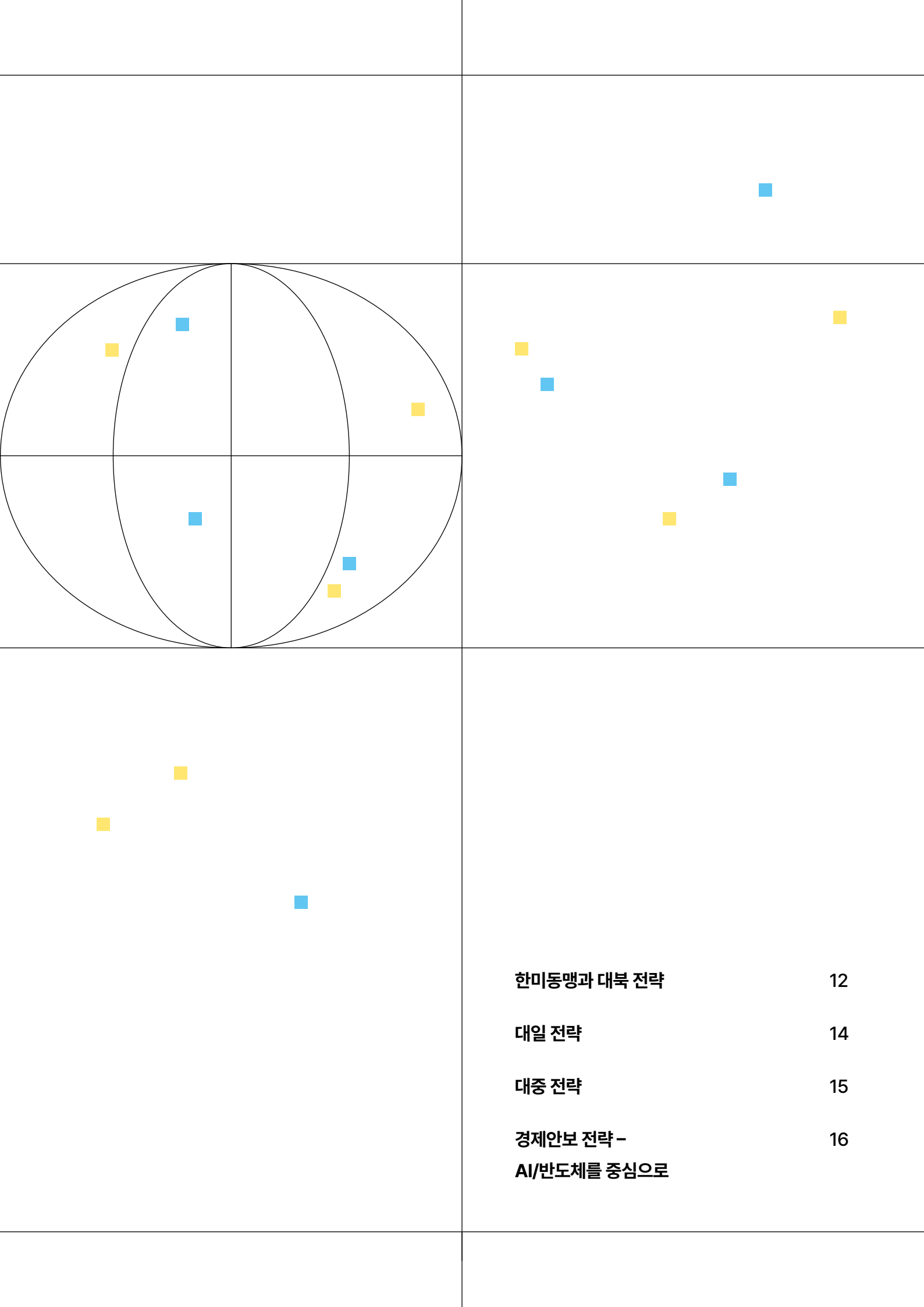
동아시아연구원

오인환 사무국장

전략 제언 요약

본 장에서는 2025년 7월 24일
공동 학술포럼에서 논의된
△한미동맹과 대북 전략 △대일 전략
△대중 전략 △경제안보 전략 등
핵심 분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에 기재하였습니다.





신정부 외교안보 전략 제언 요약

한미동맹과 대북 전략

1

**능동적 동맹 변환,
확장 억제 강화,
연루 위험 최소화**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적극 수용하고, 주한미군 감축 및 조정 논의 시 단순 숫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전력 감소를 보강하며 자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핵 위험 대응에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이므로, 정보 공유 확대, 공동 기획, 위기 소통 체계 구축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략 기조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선을 유지해 연루 위험을 방지하고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극대화해야 한다.

2

**북미 회담
단기 성과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스몰딜 체결 시 한국의 군사·외교적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제재 완화나 자원 개발 등 단기 합의가 나올 경우, 한국의 참여와 견제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북·러 과학기술 및 군사 협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첨단 무기 개발 동향을 파악하며 국제 제재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단기 성과의 장기적 안보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화

스몰딜 이후에도 억제와 대화가 병행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한반도의 장기적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층적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 구조에 거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과거로 회귀할 경우, 한국 주도의 대북 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4

통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확립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북한의 '국가 대 국가' 전환 전략에 대응해, 통일을 북한 주민과 연결된 헌법적 가치로 재정립하고, 장기적 통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5

이분법적 접근을 탈피한 대미·대북 실용 외교 추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비대칭성을 인정하되,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기반한 거래적 실리주의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정책의 변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지속성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한 장기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 목표가 '핵보유국 지위 확보'임을 직시하고, 선의를 베풀면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어설픈 기대 혹은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유인책과 억제책을 결합한 실질적 대화를 통해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일 전략

1

협력 과제와 역사 문제 분리·대응: “투-트랙 외교” 추진

현재 한국과 일본 국민은 서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다. 우리 국민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는 역사 문제이다. 그러나 수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일본에 대한 인상과 관계 개선 지지가 높다는 점은 신정부가 역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한

‘투-트랙 외교’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과거처럼 역사 문제가 협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역사 문제에서는 보편적 견지에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경제·안보 협력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대미 과잉 의존 완화: 한일 공조 강화

한일 양국은 트럼프 정부의 동맹국 정책을 둘러싼 불안과 불신이 커지는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다. 이에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유사 시에는 양국 간 역할 분담 조정도 병행한다.

‘미국 리스크’에 대비해 다자주의를 병행 추진하고, 유사 입장국과의 소다자 협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을 배제한 국제협력, 즉 EU와 CPTPP 국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대중 의존 축소: 공급망 안정화와 탄력성 확보

한일 양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탈중국화, 다변화를 향한 공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 무역 의존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과잉생산과 대미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제한으로 한일을 포함한 제3국 시장에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제 무역 질서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중일 삼국 협력을 내에서 한일이 공조해 중국과 건설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중 전략

1

동심원 전략과 소다자 협의체를 통한 대중국 공동 대응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아세안, 인도 등 유사 입장 국가들과 소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중 협상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동심원 전략’의 일환으로, 국력과 제도·가치의 수렴도를 기준으로 협력국을 다층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되,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중 간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고,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공동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한·중 2+2 당·정 협의체 구축

중국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공산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중 외교를 위해서는 당과의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2+2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초당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국무원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실질적 결정 권한이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공산당과의 직접적인 외교 채널은 중국과의 신뢰 기반 외교에 필수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채널을 제도화하면,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대중 외교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3

한·중 공급망 협력과 다극형 네트워크 구축

핵심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중국에 집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 통제 대화체’를 상시 가동해 취약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조율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수입선을 다변화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입선 다변화는 한국과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및 해운망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동유럽, 동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리스크 분산에 유용하다. 위기 발생 시 회복 가능성이 높은 다극형 공급망 구조는 한국의 외교·경제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안보 전략 – AI/반도체를 중심으로

1

AI 전환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육성 중심의 국가 전략 수립

한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동맹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AI이다. 해당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주도자가 아닌 인프라 제공자이자 시장 조율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전력 등 기반 인프라의 ‘스케일업’ 투자와 함께,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상사형 지원체계 구축, 규제 완화, 지역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발적 AI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2

제조 AI 생태계 확충

한국의 경제안보 분야, 특히 AI 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접목하는 제조AI 생태계의 전략적 확충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주도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제조업계와 AI 모델 개발사 간 협력 연결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간극을 메우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가치를 창출하는 AI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정 효율화, 예지보전, 에너지 절감 등을 가속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AI 도입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 기술 확산을 위해 L0~L3* 별 다층위(Multi-layered) 접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존 산업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AI 기술 현장 안착을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경영정보시스템(MIS) 등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내 ERP, MIS 설루션 업체들이 자사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제조 기업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협력 모델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L0: 일반적 AI 모델, L1: 업종별 기본 튜닝 모델,
L2: 회사별 세밀 튜닝 모델, L3: 회사의 세부 공정별 최종 튜닝 모델

3

AI 반도체 생태계 확충

AI 시대 핵심 경쟁력은 AI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국내 팹리스(Fabless) 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 조달을 활용해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신경망 처리장치(NPU), 텐서 처리장치(TPU), 데이터 처리장치(DPU) 등 다양한 주문형 반도체(ASIC)를 대상으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조달청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유망 기업의 반도체 칩을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량 구매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팹리스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레퍼런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산업 특화 AI 데이터센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전국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중 최소 1~2개는 바이오, 금융, 국방 등 특정 산업에 최적화된 데이터와 연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분야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특화 산업의 AI 서비스 발전을 견인한다.

셋째, 공적 파운드리(가칭 KSMC)를 설립해 중소 팹리스를 지원해야 한다. 국내 중소·스타트업 팹리스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인 칩 테이프 아웃(Chip Tapeout) 부담을 완화하고, 소량 시제품 생산을 저비용으로 지원하는 공공 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디어를 칩으로 빠르게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4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
개발 과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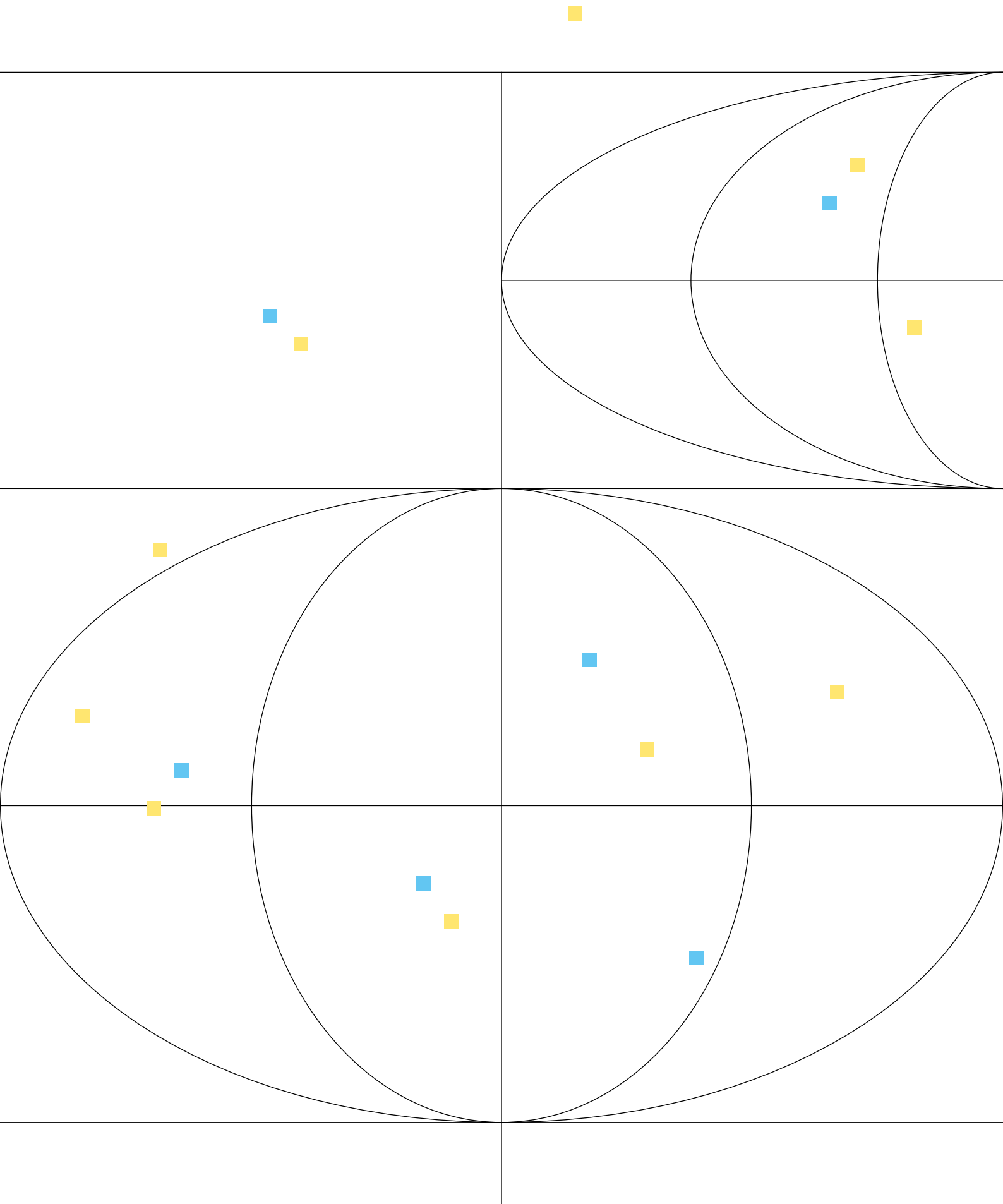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 패러다임을 넘어선 장기적 관점의 원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는 △비(非)실리콘 소재 기반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기술 △비(非)전자 소재 기반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기술 △새로운 컴퓨팅을 지원하는 반도체 소자 설계 기술과 같은 도전적인 R&D 과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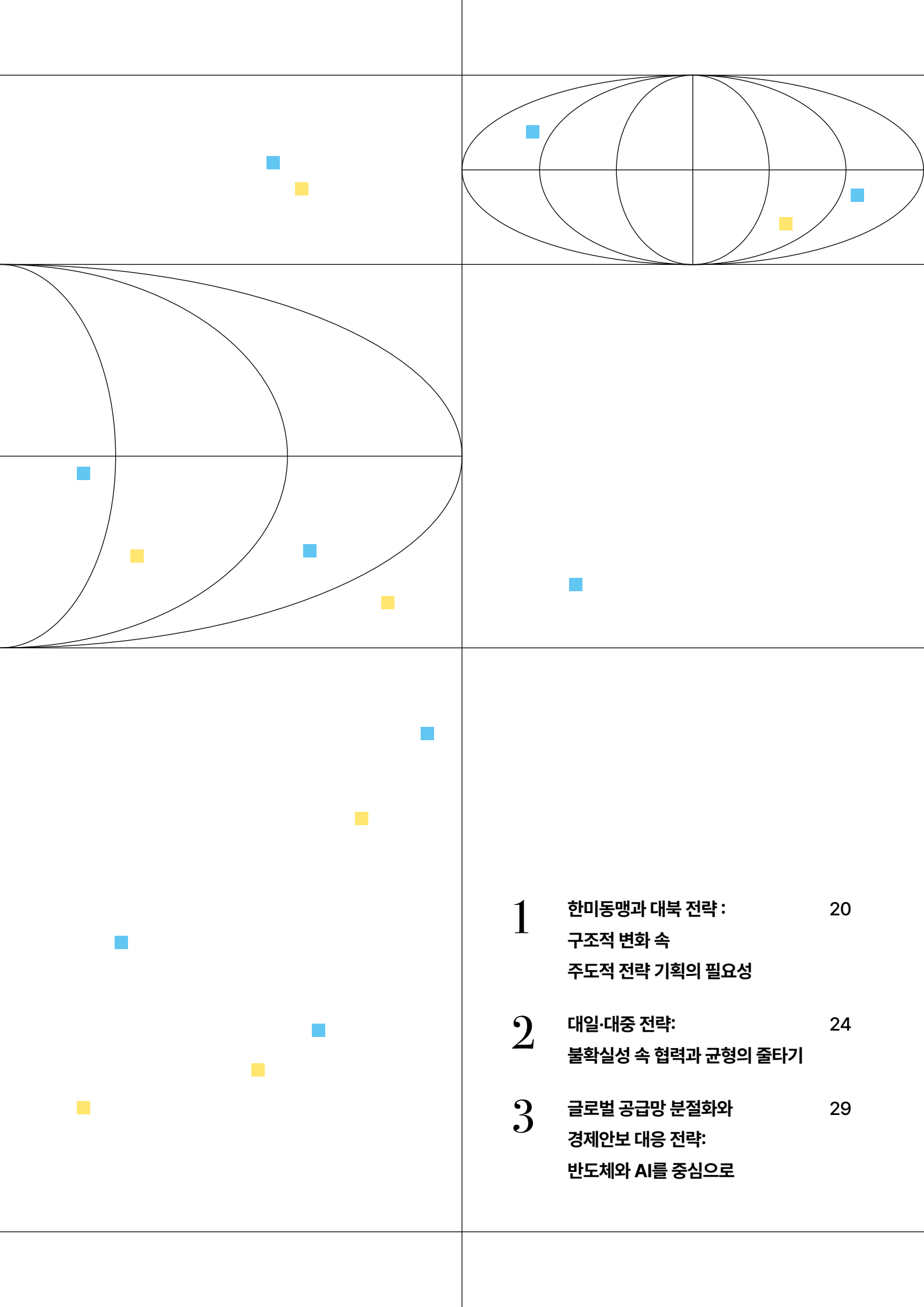
5

개방성과 보편가치를 담은
한국형 AI 모델 구축 및
기술외교 강화

폐쇄적인 소버린 AI 담론을 넘어, 민주성과 다양성을 내포한 개방형 AI 모델을 통해 한국의 기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 및 중견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 AI패권 경쟁 속에서 자율성과 전략적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





한미동맹과 대북 전략: 구조적 변화 속 주도적 전략 기획의 필요성

공동 집필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홍용표 한양대 교수

편집 오인환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1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은 변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에 전략적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감축 및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동맹의 핵심 현안들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북·중·러 협력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각각 한미동맹과 대북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러한 전략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정섭 박사는 미국의 전략 기조 변화를 현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국익 중심의 능동적 동맹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전재성 교수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미 간 확장 억제 및 전작권에 대한 전략 대화를 명확히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와 대화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잠재적인 북미 협상 국면을 활용할 수 있는 주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서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변화한 전략 목표를 냉철히 인식하는 가운데, 이념과 국내 정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삼중 도전’과 능동적 동맹 변환론.

김정섭 박사는 한미동맹과 관련한 다중적인 도전 과제를 ‘삼중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 박사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확약(Commitment) 약화 △미·중 간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의 증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미동맹 비용 부담의 증가를 한미동맹이 마주한 삼중 도전이라고 제시하였다. 김 박사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에 대한 확약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비용 부담은 높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미동맹의 변환에는 도전과 기회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동맹 변환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미동맹의 첫번째 현안으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인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김 박사는 이를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수용하거나 협상에서 후퇴하기보다는, 소요 기반 증액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인 틀 속에서 방위비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은 NATO 회원국과 달리 이미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증액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두번째 현안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병력 감축 문제를 논의하였다. 김 박사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 전담 병력이 아니라, 역내 미·중 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이 검토되고, 장기적으로는 1만 명 수준 감축안까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유엔사령부의 일본 이전, 주일미군과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는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유사시 역외 차출 가능성을 수용하되, 한국의 불필요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번째로 논의된 현안은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김정섭 박사는 한반도 방위에

대북 전략의 재설계와 국제 구조 속 조건 변화.

대해 미국이 한국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 박사는 기존 연합방위태세에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으며,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한국 안보의 자주성을 높이고 동맹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동시에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구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제 조건과 과제가 무엇이며 어느 수준까지 현재 준비되었는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박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확장 억제, 미국 확약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상 유지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북핵 억제, 동북아 핵 도미노 방지, 한반도 안정 유지 등 한미동맹의 공통분모는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국이 이번 기회에 보다 주체적으로 동맹 구조를 재설계하고, 자강적 국방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동맹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전재성 교수는 1993년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32년이 지난 지금은, 남북관계나 북한 내부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신 북·중·러 삼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대외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북한은 한국의 대북 전략과 무관하게 자율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 교수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지위 제고, 군사기술 이전, 경제력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북·러 밀착을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과 쌀값 급등, 시장 왜곡 등을 북한의 경제 정책 결과로 보았으며,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긍정적인 지표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은 북한이 북미회담에 적극 나설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남·대미 협상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있으나, 내부 정치·경제 상황이 협상 타결을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하며 '두 개의 한국'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지렛대는 제한적이며, 북한은 한국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북한에게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독자적 대남 정책의 전략적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 타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북한은 북·러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이미 전략적 여유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단기 협상에 절박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앞세우는 협상 타결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 구도는 기본적으로 상호 실익에 기반한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핵 군축과 스물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군사적 실익을 확보하려 하기에 주한미군 축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경제 제재 완화, 광물 협정과 관광개발 등은 모두 협상의 교환 가능 항목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핵 동결과 단기적 외교 성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지금 처한 전략 환경을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대북정책은 대미, 대중, 대러 전략의 함수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 교수는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대북정책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하며, 군사 억제력 중심의 장기적 접근과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는 복합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를 조기에 소진하지 않는 전략을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용 외교의 재정립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남북관계 인식.

홍용표 교수는 앞선 발표자들의 구조적 분석에 공감하면서도, 실용 외교라는 구호가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명분과 국내 정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전략적 일관성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과거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었던 수사(修辭)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외교는 실용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념적 이분법과 국내 정치 논리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불참 기류를 비교하며, 실용 외교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시기적 정세 판단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실용 외교는 가치 중심 외교와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외교적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친중이냐 친미냐’라는 정치적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홍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외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를 경계하고,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유인책과 억제책을 결합한 대북관여를 수단으로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일·대중 전략: 불확실성 속 협력과 균형의 줄타기

공동 집필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 교수

손인주 서울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편집 정동호 최종현학술원 국제학술1팀 매니저

강준호 최종현학술원 국제학술1팀 매니저



한일·한중 관계는 양국 내 정치 변화와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적 변동기를 맞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영역 전반에서 구조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 유지 사이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외교적 선택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는 대일·대중 관계에서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연세대 교수)은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 내 일본에 대한 긍정적 여론 변화가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정치의 유동성이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기술 굴기에 기반한 공세적 외교가 내부 불안과 취약성의 반작용임을 지적하며, 한국은 법치·자유 원칙에 기반한 다원주의, '동심원 전략'을 통한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안보적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강·연대·포용' 원칙을 중심으로 한일·한중 외교를 조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규칙 기반 질서에 부합하는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의 향방: 전략적 변동과 협력의 가능성.

손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를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기조가 향후 5년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향방이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일본의 정치 동향과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유지 여부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 이후 가치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동맹이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 외교는 불안과 불신에 직면했다. 손 원장은 트럼프식 동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이익 제공 △안보 리스크 분담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미국 의존을 줄이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두고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플랜 A는 기존대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 패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고 방위비를 증액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일본을 '대체 불가능한 동맹'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플랜 B는 미국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이 시나리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며, 자강적 군사력 강화, 동맹과 자립의 균형, 소다자 협력을 통한 헤징(Hedging), 대중국 억제 유지, 균형 있는 미·중·일 경제 외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통한 자유주의 질서 회복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동맹과 자립의 균형을 조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손 원장은 보았다.

손열 원장은 최근 선거에서 '재팬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15석으로 의석을

확대하고, 국민민주당 또한 동맹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와 대안 필요성을 제기하며 약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내에서 플랜 B, 즉 미국 의존 축소와 전략적 자율성 강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일본이 곧바로 플랜 B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본 정치의 유동성, 정책 선택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리스크가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외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배 증가했고, 비호감은 크게 감소하며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비호감의 주요 원인은 여전히 역사 문제이지만, 일본 관광, 대중문화, 식문화와 같은 직접적 경험이 호감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역사문제가 불신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협력과 분리되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손 원장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한국 내 시각이 여전히 진보와 보수, 여야 간에 크게 갈린다고 지적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진보층은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보수층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2022년 이후 심화되었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상이 급격히 개선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대일 정책 개선에 대한 지지와 불만의 간극을 보여주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현 정부의 대일 기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한일관계가 어느 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열 원장은 한일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한국의 국내 정치와 일본의 정치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에서는 진보 진영이 대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할지, 이재명 정부가 현재 기조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일본에서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약화와 참정당의 약진이 정치적 불안정을 확대시키며, 우익 성향의 강화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지만, 트럼프 리스크와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기존의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속 대중 전략.

손인주 교수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외적으로는 민족주의와 기술굴기에 기반한 공세적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체제 불안감과 구조적 긴장을 안고 있는 이중적 존재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내러티브는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정당화하는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손 교수는 이 외교 전략이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성장을 둔화, 청년실업, 빈부격차, 부패, 후계자 부재 등 내부 문제와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 위기 등에서 기인한 불안의 반작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중성과 공세적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대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법치와 자유에 기반한 '원칙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권위주의 체제가 단일한 목소리를 강요할수록, 한국은 자유와 다양성,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둔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외교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 주도의 '동심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력과 제도·가치의 수렴도를 기준으로 외교 파트너를 구분하는 전략이다. 미국, 일본 등 정체성 수렴국과의 협력을 중심축으로 삼고,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전략 공간을 다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공동 회복탄력성 전략'을 제시하며,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 해운망, 통신망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강화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그는 한·미·일 간 '2+2+2' 형태의 다자 협의체 신설 등 외교·안보·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정상급 대화뿐 아니라, 국무원 및 공산당과의 다자적 접점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외교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시진핑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는 실무 수준을 넘어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외교 유연성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해상 물류망과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위기 발생 시 회복력이 높은 다극형 경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끝으로 손인주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재, 한국이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전략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자적 외교 전략과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원칙적 다원주의', '동심원 전략', '공동 회복탄력성'이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실천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 외교와 전략적 대응: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 방향.

이상현 박사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대일·대중 외교 전략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보다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균형 있는 외교 태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외교가 가치와 이념 중심 외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지만, 국제 질서가 점차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현실 속에서는 실용외교가 무원칙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역사 문제와 외교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의 한계를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진보 진영 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진보 진영의 과격한 대일 이미지를 상징했던 '죽창가' 담론을 극복하고, 이를 위한 국내 정치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의 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박사는 한중관계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구조적인 갈등과 연루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가 단순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및 대만 유사 시 대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 내 대중 부정 여론에 대응해 중국도 태세를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하고 솔직한 입장 전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외교 환경 속에서 한국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첫째, '자강'을 강조하며, 이상현 박사는 증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우선주의(MAGA)' 지지층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수에 대비한 독자적인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연대'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G7, 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규칙 기반 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포용'의 원칙을 통해 중국,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실리적 관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비민주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이들과의 호혜적 협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경제안보 대응 전략: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공동 집필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박종희 서울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

배영자 건국대 교수

편집 김민승 최종현학술원 국제학술1팀 매니저

박혜연 최종현학술원 국제학술1팀 매니저

3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외부 환경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는 'AI 대전환'을 내세워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첨단기술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정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AI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과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그리고 AI 기술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AI 반도체 인프라 투자와 장기적 맞춤형 산업 정책을 통해 전략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미국·중국 양극체제의 AI 전략을 모방하지 않고, 민간 창의성과 국가 전략이 조화를 이루는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제공과 시장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세계 공급망과 기술 규범이 가치와 이념에 따라 분절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호주의 진영화 2.0'으로 설명하며, 반도체 분야가 이러한 진영화에서 가장 참여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와 기술 외교 강화를 촉구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경제안보와 반도체 전략.

김양희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세계가 가치와 이념을 기준으로 분절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호주의 진영화 2.0'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과 기술 패권 유지를 목표로 '거대 중국 포위 구상(Grand Encirclement Plan for China)'과 '북미요새론(Fortress North America)'을 내세워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 EU, 한국 및 USMCA 회원국(멕시코, 캐나다)과 같은 핵심 동맹을 대중국 보호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배치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를 중심으로 자국 진영의 외연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시장, 기술, 규범의 분절을 가속화하며, 한국은 지정학적·기술적 요충지로서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는 진영화가 가장 참여하게 작동하는 분야로, 미국 진영의 중국 배제는 한국의 반도체 및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파제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라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일부 AI 영역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고관세 장벽, 미국 내 투자 압박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NATO 협력 확대 등 경제에서 군사안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영 편입 비용 부담이라는 위협요인도 안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반도체, AI, 방산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거버넌스, 공급망 안정성, 경제안보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보호주의 진영에 실질적으로 속하되, 그 안팎에서 중견국 연대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경제안보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준 교수 역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 중심으로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과거 저부가가치 범용 반도체 생산에서 벗어나, 최근 고부가가치 AI 반도체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빅 펀드' 등 국가 차원의

육성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AI, 모빌리티,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실제 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인 화웨이, 알리바바, 딥시크 등을 통해 AI 생태계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SMIC, 화홍반도체 등 세계 10위권 내 기업을 다수 확보하여 대만의 독점적 반도체 제조 지위에 도전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해 다각적인 보조금 전략을 추진하며, 기술 내재화는 물론 선진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 도약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중심의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리쇼어링(Reshoring)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공정 팹(Fab)을 미국 내로 유치하며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 AI 기술 주도권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AI 기술 접근성을 통제하는 한편, 핵심 동맹국이 미국 주도의 AI 표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중국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하는 차등적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권 교수는 한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력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여전히 첨단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이 기술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기술 기반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버티컬 AI(Vertical AI)로의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AI 생태계 구축 및 제조업 응용 성공 사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 교수는 AI와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산업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 AI 기술 응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경제안보 전략과 국부 창출 연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AI 생태계 육성 전략과 기술외교.

AI 기술은 21세기 일반 목적 기술로, 20세기의 전기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박종희 교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AI 세계 3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가 주도나 대기업 중심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AI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모방이 아닌 '제3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분산형 창발 생태계를 통해 AI 혁신을 이끌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술을 스타트업에 아웃소싱하거나 초기 단계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OpenAI나 Anthropic 같은 고위험·고수익 기술기업이 출현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본시장과 인재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 간 유연한 협업 구조는 AI 기술 진화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인프라와 기초 연구 투자를 보조하되 기술 개발 자체는 시장의 선택과 자율성에 맡기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계획과 지역 정부의 실행력을 결합한 집중형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다. 딥시크 등 신생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지방정부의 집중 투자, 민간 대기업의 초기 지분 투자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이는 중국이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국가-시장 혼합형 모델’로 평가되며, 기술 내재화와 산업 주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전방위적 AI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접근법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미국처럼 풍부한 자본시장도, 중국처럼 강력한 국가 주도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의 세계적 경쟁력, 탄탄한 제조업, 전략 기획 역량,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우수 인재 풀 등 복합적 강점을 가진 중간 규모 기술국가로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 또는 중국 모델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창의성과 국가 전략이 조화되는 ‘제3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 지정자’가 아니라 인프라 제공자, 인센티브 설계자, 시장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지나친 통제나 방향 설정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이를 “자상하지만 엄하지 않은 부모의 역할”로 표현하며, 정부는 민간의 창발적 혁신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전략적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배영자 교수는 여기에 더해 한국형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스케일업(Scale up) 수준의 공공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반도체와 인터넷 인프라 투자 사례처럼, 정부가 GPU, 데이터센터, AI 전용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에 적극 투자하지 않으면 유망 스타트업조차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AI 기반 서비스의 상용화가 여전히 유료 서비스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접근성과 확산 기반의 취약성을 방증한다.

이에 박종희 교수는 AI 전환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보고, 정부가 △기반 인프라 확충 △정밀한 금융 지원 △인력 수급 계획 △규제 개혁 △창업 거점 전략 등을 다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상사형 지원 모델, 보편적 보조금 체계, 공학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편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교수는 기술 외교와 글로벌 협력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I는 독자적 기술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공동체를 활용하되 폐쇄적 자주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내포한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사우스 및 미들파워(Middle power)와의 확산·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AI 대전환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어떤 생태계에서 누가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 벤처캐피탈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5자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과 시장, 사람과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AI 전략을 현실화해야 한다.

기관 소개

동아시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독립·민간 싱크탱크입니다. EAI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와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계를 이끄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정책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전공 분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경계를 넘어 융복합적 연구와 증거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한국, 인구,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안보, 탄소중립 등 6개 주제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 클러스터를 운영 중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미래 사회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Chey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은 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20주기를 기념하여 2018년에 출범한 지식 교류 플랫폼입니다. 한반도와 주변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날로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글로벌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인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계 주요 대학, 연구소 및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사회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학제 간 연구를 지원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최종현학술원
주소 (061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7층
연락처 02-6310-7800
웹사이트 www.chey.org
ISBN 979-11-989836-4-0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